

2016년 전북인재 의무채용률 13.1% 불과

김광수 의원, “전국 평균 13.3%·권고기준 35%에 못 미쳐… 의무채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첫걸음”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 갑)은 26일, '최근 3년간 지방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하며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도 10.2%, 2015년도 12.4%, 2016년도 13.3%로 매년 소폭 상승했으나 시행령 상 권고 수준인 35%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27.0%), 대구(21.3%), 경북(17.4%)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전북(13.1%)을 비롯한 전남(11.4%), 충북(8.5%) 등의 지역은 평균에도 미달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소득격차, 교육격차 등 다양한 격차의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해소 역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정책과제이다.

그 중심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지역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실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담아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채용토록 하는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중시하며 지난날 22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사 의혹 진실은 '제보조사' 부실 검증 의혹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수도권 집중,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청년실업 해소, 지역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첫 걸

음"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인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 역시 제1호 법안인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법제화되어 국가균

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계속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정동영, 오늘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토론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 국민의당의 정치적 위기 발생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고, 제3 정치세력 출현의 의의와 방향성을 찾는 '한국정치의 재구성-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발표자로 나서는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발제문에서 정권교체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선악, 찬반의 이분법만이 팽배해있음"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후에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이일영 교수(한신대 경제학)는 한국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진단에서 "촛불혁명은 87년 체제의 극복이 아니라, 그것을 수호한 보수적 혁명이자 6월 항쟁의 사후 완성"이란 측면을 전개한다.

이 토론회는 유창선 정치평론가, 이일영 교수가 발제하고, 정동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고성국 정치평론가, 노동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석한다. /김진성 기자

조배숙,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이끌어내

익산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은 26일, 코레일 김천수 사업개발본부장을 직접 만나, 익산역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익산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며, '평화의 소녀상'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코레일 측을 적극 설득,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코레일 측의 공식 답변을 받아냈다. 이로써 난관에 봉착했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은 "익산역 광장에 세워질 평화의 소녀상은 박근혜 정권에서 밀실 체결한 위안부 협정문을 밝고 서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으며, 지난 정권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협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장제원 "추경 소신투표 징계는 '난센스' 반발

자유한국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본회의 표결 보이콧 방청에도 소신투표를 한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앉아서 자신의 생각대로 투표를 한 것을 가지고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에서 이렇게 행동하기로 했는데 저만 혼자 빠졌다고 '배신이다', '자기만 튀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쟁점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인데 (여당이) 1만2000명을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2500명까지 양보를 받아냈다"며 "이건 정우택 원내대표가 협상을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협치를 하고 양보를 받아낸 안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국회의원 개개인의 생각대로,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강제당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국회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확대·공론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내부의 친박과 비박 간 힘겨루기 문제에 대해 장 의원은 "이제 친박, 비박 이런 프레임보다는 탄핵과 비탄핵으로 세력이 재편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당 안에는) 탄핵이 조작된 것이고 정치적 보복이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화뇌동해서 탄핵이 이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탄탄하게 맞서는 생각을 한다"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 여론 형성 등을 갖고 지루한 논쟁과 얘기들을 거쳐야 정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靑,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MB문건 'NCND'

"국민소통수석실에서 확인 작업 할 수 없다... 공개 여부도 법적 검토 필요"

청와대는 26일 국가안보실에서 발견한 과거 정부 문건에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이 담긴 MB정부 시절 문건이 확인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관련 문건이 존재하는지를 국민소통수석실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 "안보실에서 발견한 문건 중 MB정부 때 작성된 롯데월드타워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MB정부 때 롯데월드타워 건립 방침을 당초 '불가' 입장에서 '허가'하는 쪽으로 급진화하게 된 배경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유근 전 해군 참모총장이 연루된 STX그룹의 유도탄 고속함 수주 등 반산비리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소통수석실 차원에서) 확인이 된다면 확인은 해줄 수 있을텐데 (자체적으로 확인이 안됐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MB정부 문건이 발견됐는지 사실관계 여부도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사 문건이 존재한다고 해도 공개를 할 것인지, 공개를 해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재의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도 부인도 않는(NCND)'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뉴시스

정재호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발의'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등록금 대출금리 상환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해 원리금 상환을 등 여타 금리 상승요인이 반영된 2.5%대의 대출금리를 1%대로 인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등록금 대출의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도록 돼 있다.

그는 "(현행 방식은) 변동금리 형식이라 금리 상승분이 채무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라며 "등록금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